

한국노총-민주노총 '광주형 일자리' 신경전

한노총 "민노총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취준생에 귀 기울여야"
민노총 "노동기본권 희생양 삼은 야합...임금 하향 평준화 초래"

양대 노총이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공개 설전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광주형 일자리는 옳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 고도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이 로드' 전략이라며 "노동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 와중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 일각의 그릇된 목소리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일자리를 비판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 기본권을 '희생양'으로 삼은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첫 모델로,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월 초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민정 협약 파기를 선언해 좌초 위기에 빠졌으나 광주지역본부의 복귀로 다시 분궐도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현대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협상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해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에서 일당협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점 등에 주목해 임금을 포함한 노동 조건 결정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다며 노동 기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

며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비판을 '반(反)노동적인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한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낮은 임금과 노동 통제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산업을 포화 상태라거나 중복 차종, 풍선 효과 문제 등을 말하지만 역으로 지어낸 공색한 논리"라며 "산업이 포화상태인데 대기업 노조는 왜 사업주에게 투자를 더 하라고 하고, 특근과 생산, 인력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반노동적이고 반대대적인 기득권 지키기는 포기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따러가는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착취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끄러운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언제든 만나 대화와 연대를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하지만 대기업 노조가 노사 간 담합을 통해 우리를 매도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노총 중앙이 하루 만에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법안인) 광주 글로벌터스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 중인 청년의 목소리에 대기업 노조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백운고가 철거 기념식 4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고에서 열린 철거 기념식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들이 고가를 걸으며 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광주시는 11월까지 백운고가 구조물 철거를 끝내고 2023년까지 도시철도와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계층 광주시, 생활 보조금 지급

거주 당시 가구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세대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74만9664원)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라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20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서 공고 및 접수 받고, 7-8월 자격조회 및 적격 여부 결정, 8-12월 증명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밟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

송풍방사팬·미세살수장치 등

전남도는 지난 4월초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재배 농가의 피해가 커 방사팬 등 저온 피해 예방시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리, 이상저온 피해가 산간지역, 분지 등 냉기류유입이 많거나 이동통로인 지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사팬 등 예방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지원될 과수원 방사팬은 배, 매실, 복숭아 등 봄철 개화시기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작동해 섭씨 2도에서 6도 높은 상층부 공기로 지상의 찬공기를 데워주는 저온피해 예방시설이다.

특히 송풍방사팬을 비롯 열풍기를 함께 설치해 효과가 큰 열풍방사팬, 서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세살수 장치 등을 농가 희망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을 희망한 농가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비 중 5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광주지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빈번히 발생한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사팬 등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과수농가들은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피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방사팬 설치와 품종갱신 등 정부 차원의 저온 피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택시운전사에 생계자금 50만원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전사들에게 긴급 생계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 긴급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가운데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30일 이상 근무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인·법인 택시 조합에 신청하면 50만원 상당 광주 상생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광주 택시업계는 2월부터 많게는 40%까지 매출이 감소했지만, 상당수가 정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시는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자 본인 연 소득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감소율, 무급 휴직 일수 등 조건도 고려해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 택시를 중심으로 상당수는 혜택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스, 지하철과 함께 목욕하 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택시업계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센터, 5·18 진상규명에 힘 보탠다

5·18조사위와 업무협약

광주트라우마센터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진상규명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5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폭력 치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범위에 포함된 피해자 신고 독려와 성폭력 사건의 진상 조사 활동 협력, 조사 참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내 최초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재활센터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90여 명의 국가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심리교육, 상담 등 다양한 치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천 시민 친화적 도시 녹지 생태계 조성 권고

광주혁신추진위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4일 광주천을 중심으로 시민 친화적 도시 녹지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광주시에 권고했다.

광주천은 하천 복개, 주변 녹지(친수)와의 단절 등으로 도심 생태와 시민 친화적 도심 하천으로서 기능이 상실됐다고 혁신추진위는 지적했다.

이에 혁신추진위는 ▲중·장기적 도시녹지 체계 조성전략 마련 ▲무등산·영산강·

광주천을 축으로 한 도시녹지 연결성 강화 ▲시민 친화적 생태공간 복원 등 3대 기본방향으로 21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권고문을 전달받은 시로부터 3개월 안에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주정민 광주혁신추진위원장은 "광주천은 150만 시민의 삶과 애환이 담긴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광주천의 광주다운 회복은 시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